

일본군 위안부 문제해결 촉구 결의안
검 토 보 고 서

2011년 9월 1일

마포구의회 운영위원회
전문위원 김은모

일본군 위안부 문제해결 촉구 결의안 검토보고서

1. 안건명

- 일본군 위안부 문제해결 촉구 결의안

2. 제출일자 및 제출자

- 2011년 8월 22일(월), 서종수의원 외 7인

3. 위원회 회부일자

- 2011년 8월 29일(월)

4. 검토의견

- 본 안건은 우리나라가 일제 식민지 시대 강제로 일본군에 끌려가 고통을 겪었던 일본군 '위안부' 할머니들이 일본정부의 사과와 적절한 보상도 받지 못하고 오랜 기간 명예훼손과 고통속에서 살아가고 있어
- 이에 마포구의회는 일본정부가 피해자의 명예회복과 피해보상을 위해 적극적인 대책을 강구하여 일본군위안부 문제가 올바르게 해결 될 수 있도록 본 촉구 결의안을 제안 함.
- 올해는 우리나라가 일제로부터 해방된 지 66주년 그리고 국내에서 일본군 '위안부' 문제해결 운동을 시작한 지 21년이 지났으나, 여전히 일본정부는 피해자들에게 공식 사죄와 법적 책임을 다하지 않고 있고, 오히려 명예훼손을 서슴치 않음은 물론 역사교과서에서조차 일본군 '위안부' 문제를 삭제하여 거짓역사 교육을 후손들에게 가르치고 있는 실정 임.

- 마포구의회는 지난 2011년 8월 4일 경기도 광주시에 소재한 나눔의 집을 방문하여 현재 고령으로 75명만 생존해 계시는 일본군 ‘위안부’ 할머니들이 많은 고통과 함께 병마에 시달리며 어렵게 생활하시는 모습을 확인하고, 하루속히 일본군 ‘위안부’ 문제를 해결해야 하는 시급성이 있어
- 이에 마포구의회가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에 대한 사죄와 법적 책임이행, 올바른 역사교육 등을 요구하는 결의서를 채택하여 일본 정부가 하루속히 문제 해결 등 적극적인 조치를 할 수 있도록 한 본 결의서 채택은 반드시 필요한 조치라고 판단 됨.
- 이제 일본군 ‘위안부’ 문제는 일본정부 및 한국정부에서 조차 잊혀져 가고 있지만, 일본 ‘위안부’ 피해자 당사자인 할머니들은 문제해결을 위하여 1992년 1월부터 19년 동안 서울 일본대사관 앞에서 매주 수요시위를 하고 있고,
- 국외에서도 피해자들과 민간단체의 노력으로 유엔인권위원회, 국제노동기구(ILO) 기준적용위원회, 미국하원과 네덜란드, 유럽연합 및 캐나다 의회에서도 일본정부에게 피해자에게 공식 사죄와 법적 배상, 올바른 역사교육 등을 요구하는 결의서를 채택하였고,
- 2008년에는 대한민국 국회와 대만 국회에서도 일본정부에게 사죄와 법적 배상을 요구하는 결의서를 채택하였음.

- 이 밖에 일본 국내에서도 2008년 3월부터 전국 각 지방자치단체 의회에서 일본정부와 국회를 향해 일본군 ‘위안부’ 문제를 성실히 해결할 것을 요구하는 결의서를 채택하고 있으며, 시민들은 일본 정부가 직접 피해자에게 사죄하고 배상하게 하도록 일본국회에서의 입법을 위해 활동하고 있음.
- 일본군 ‘위안부’ 문제는 이제 남의 문제가 아닌 국가적 중대 사안으로 현재 전국의 광역·기초의회에서 일본군 ‘위안부’ 해결을 위한 적극적인 조치가 취해지고 있는 이때에 우리 마포구의회에서도 적극 동참하여 대응하는 것이 바람직한 조치라고 사료 됨.
- 따라서 마포구의회는 본 결의안을 채택하여 주대한민국 일본 대사관과 외교통상부 등 관련단체로 이송하여 일본정부가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에 대한 사죄와 법적책임, 올바른 역사교육 등 문제가 하루 속히 이행하여 해결될 수 있도록 세계만방에 적극적으로 결의서를 천명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 됨.